

오피니언

다산포럼

임현진



최근 KAIST학생들의 연이은 자살은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일류대라고 하는 대학들에서 적지 않는 학생들이 해마다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적 현실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OECD 평균 14.5명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까닭이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중에서 1위가 바로 자살이다. 실제로 청소년

대학생 자살, 교육 정상화가 답이다

년 5명 중 1명꼴로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한다. 이는 성인보다 높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예를 들어, 12-18세 구간의 청소년들의 자살생각률이 18.5%에 달해 성인 평균 15%보다 높다. 이들 중 지난 5년간 고교생이 가장 많이 자살을 선택했고 그 다음이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순서다. 우리나라에서 자살의 원인을 살펴볼 때 이른바 '이스탈린효과'(Easterlin effect)를 고려할 수 있다. 사회 구조가 빨리 변화하고 복잡해지다 보니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안정이 흔들리게 된다. 자원은 모자라고 용력은 늘어나지 않다 보니 사회적 경쟁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출생기간이 같은 어떤 성원들의 숫자가 많은 경우 다른 출생기간의 성원들보다 사회적 경쟁에 더 휘발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물질주의적 가치가 팽배하는 가운데 사회적 열망에 비해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수단 사이의 격차로 인해 결국 좌절감을 가짐으로써 자살에 이르게 된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나친 입시경쟁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학교로부터 충분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가정문제, 성적비판, 이성관계, 신체결함 등으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전

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입시제도를 학력 이전에 인성을 중시하는 틀로 바꾸어 청소년들을 지켜주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세계 36개 나라들의 청소년들의 행태에 대한 비교연구에 의하면 한국 젊은이의 '더불어 사는 능력'이 세계에서 꼴찌라 한다. 학업성취를 위한 교육방식에 충실하다 보니 시험에는 강할 수 있지만 사회적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친 대입경쟁과 과열로 인해 초·중등 교육 과정이 지식과 인격의 함양을 위한 어린이들의 혼유과 학

습 과정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있다. 특히 대학에 들어가면 수월성과 경쟁력이라는 이름 아래, 젊은이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사회와의 관계 아래 세상을 살아가는 '관계능력'을 키울 겨를이 없다. '인명 높은 '징벌적 수업료제' 아래 다른 대학보다 일찍 대학에 들어가는 KAIST의 순진하고 어린 학생들이 좌절감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지나친 제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 성적이 처지는 학생들의 개인 교사와 할 수 있는 '튜터제'를 통해 보듬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대학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교육의 철학과 방법도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수월성과 경쟁력이라는 미명 아래 젊은이들을 코너로 몰아세우는 이 나라의 교육현실이 안타깝다. 실존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죽음은 절망에서 연유한다고 본다.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인간이 자신이 절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다. 자신이 절망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실존으로 마주할 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은 절망하기 이전에 소진(消盡)되고 있다. 미래 한국을 위한 교육 개혁과 제도쇄신을 위해 가정과 학교, 아울러 정부와 사회가 모두 나서야 할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역 현안에 무기력한 전남 국회의원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역 민심이 싸늘하다고 한다. 전체 11명의 의원 가운데 3선 이상 중진 의원 5명에,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상임위원장이 2명이나 되는 데도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남도의 핵심사업인 올해 F1 국제자동차 대회는 정부 예산 가운데 추가 공사비 308억 원이 확보되지 않은 데다 운영비 608억 원 중 200억 원만 반영돼 특단의 정부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과 텃밭인 민주당은 이렇다할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이 지난 11일 임시국회 대정부질의를 통해 F1 대회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 김홍식 국무총리로부터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하니 지역민들로서는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여수엑스포 역시 의원들에게 뒷전이나 다름이 없다. 지난달 지역 의원들이 해결

하지 못한 여수엑스포 간선도로 확장사업에 대해 한나라당 김부성 원내대표가 나서 정부 예산 270억 원을 확보한 것이다.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국제과학벨트 유치에도 이들 의원은 관심 밖이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호남권 과학벨트 유치위원회 긴급회의에는 유선호·이윤석 의원만 얼굴을 비쳤을 뿐 나머지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의원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지역의 미래가 암담할 뿐이다. 지역 현안에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는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하는 게 순리다. 본보가 지난 1월 초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35.1%만이 차기 총선에서 현역의원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사실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이제라도 지역의 현안과 미래를 위해 대안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내년 봄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잇단 카페리 사고 안전대책 강화해야

전남지역에서 카페리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카페리 취항이 크게 늘고 있어 그에 따른 안전대책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7일 오전 9시 13분께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에서 카페리에 올라타던 승용차가 인근 차량을 들이받고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 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차를 후진해 배에 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4일 오전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화도 선착장에서는 승용차를 차도선에 실는 과정에서 역시 바다에 추락해 여성 운전자가 숨졌다. 이 같은 카페리 차량사고가 잇따르자 항구나 선사 측의 승하차 대책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록 주차요원이 배치돼 있으나 고작 선내 차량 배치 안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전이 미숙한 초보자나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카페리 선내 안전도 문제다. 지난 10일 밤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돼 광양~일본 카페리 편으로 연수에 나섰던 광양시 6급 직원이 바다에 추락해 숨진 사고도 정확한 사고 시간이나 위치조차 알지 못했다. 물론 모든 승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는 없지만 추락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대책이 있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국은 차제에 카페리를 비롯한 여객선 안전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이는 동시에 보다 촘촘한 안전대책을 서둘러 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배를 이용한 국내의 여행객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여객선 안전문제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선박사고는 차치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NGO 칼럼

배영복



우리 장애인들은 MB정권 들어서 LPG지연폐지와 장애인등급심사제도 도입, 빛 좋은 개살구 격인 장애인연금제 시행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장애인복지 예산삭감 등으로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 놓였다. 이러한 상실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장애인복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한목소리를 내어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장애인의 생활과 복지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예컨대 최근 광주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

의 사회참여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장애인복지의 중심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장애인복지의 중심적 과제가 되어야 하며, 또한 사회상황 변화와 권리의식의 다양성의 추구, 기대수준의 증대는 보편적 복지영역에서의 질 높은 서비스와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의 모색, 지역사회자원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

장애없는 사회 만들자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정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 추가 지원금액은 인권 광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의 저해 요인은 장애인 권리의 보장이 아닌 보호나 시혜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드는 구태적 사고와 예산책정의 불합리성 때문이다. 장애인을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회적 발전의 걸림돌로 생각하거나 여전히 격리 또는 보호,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를 무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대로 판단하여 현실과 맞지 않은 서비스 또는 생색내기식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복지실현을 위해서는 장애당사자 입장에서 정책 수립과 구체적 목표설정, 강력한 실천의지가 요구된다. 이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장애인들

이 제31주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복지의 시급한 민생 문제를 포함하고 장애인들의 진정한 염원을 담아낼 수 있는 '장애인재단' 건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중앙정책사업의 과제로 장애인단체와 행정기관 간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복지정책의 교육 및 홍보사업, 복지정책의 연구 및 개발사업, 장애인복지실현사업,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모금 활동, 지역복지단체 및 지역복지인력 간 교류협력사업,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진행하여, 광주지역 장애인 복지의 총체적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주민들과 마주하며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장애인은 있어도 장애는 없는 사회, 장애인이 사회적 편견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사무처장>

기고

조인형



최근 평등2차 일반산업단지 내 13만 1580㎡에 외국인 투자지역 확대지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외국인 투자지역 확대지정은 투자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기업의 입주요수를 충족시켜 산업구조고도화 및 고용창출 등의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평등의국인투자지역은 전국 외국인 투자지역 중 가장 먼저 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 중 하나다. 2008년 현재 매출액 증가율이 24.1%, 수출 증가율이 160.7%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성장성과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타 외국인 투자지역보다 지역 내 조달비율이 매우 높다(49.6%)는 점에서도 지역 경

는 확대지정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지역의 추가 또는 확대지정은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필요하다. 현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저해하는 정책이며 국가균형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지역의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산업용지의 공급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의 신뢰성 강화 및 투자유치활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외국인 투자지역 확대가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R&D 특구와 관련하여 외국인

광주 외국인 투자지역 더 늘려야

제에 대한 공헌도가 높다. 이번 확대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에도 첨단과학제품 생산라인이 도입되는 등 44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와 500여명 규모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고도기술기반 기업의 유치가 이루어져 지역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기업들의 입주로 인하여 납품업체의 추가 투자가 유발(최소 15개 기업)되어 추가적인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입주기업들 외에도 그동안 광주 지역에 투자지향성을 밝힌 외국인 기업들은 10여 개 기업에 이르고 있으며 투자규모는 3억765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대지정된 산업용지 물량이 올해 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지역의 추가 또

투자지역 추가지정 또는 확대지정이 필요하다. R&D 특구는 동북아 최대의 개방형 국제협력단지로 육성될 계획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연구소의 유치 등 외국인 투자유치가 필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적 협력의 산물인 연구개발 성과물은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 소재 내·외국인 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제품 생산·유통하는 과정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내 조달비율을 제고하는 등 일련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전·후방기업과 상생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술력 및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외국인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지역의 추가 또는 확대지정이 필요하다. <광주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웃음 나누며 살자

이제는 제법 날씨가 따뜻하다. 벗꽃 무리가 여의도까지 상륙했다는 소식에 농부들의 발걸음도 제법 빨라지는 날이다. 얼마 전 나이 지긋한 한 노인이 아파트 한 쪽 조그만 화단 뜰에서 부산하게 움직이고 계셨다. 가만 들여다보니 봉숭아 꽃씨를 심고 계셨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얼마후 피어날 봉숭아의 빨간 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경로당 회장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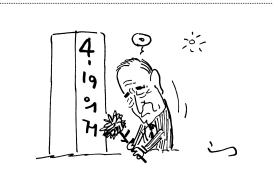
모두가 시간에 쫓기면서 사는 세상,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조그만 정성을 심으면 보기도 좋고 어디엔가 여유로움이 묻어나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웃음과 미소들을 날 수 있을 것 같다. 삭막한 시멘트 속의 세상에서 꽃씨를 심고, 사랑을 심고, 미소를 심으며, 인사를 심고 나누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얼마후에 피어날 빨간 봉숭아 꽃잎처럼 밝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본다. <서기선·광주시 동수 지산동

無等鼓

1960년의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착의 디딤돌로 꼽힌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부'로 추앙받던 이승만 대통령 추종세력에 의해 빚어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던 국민적 저항이 곧 4·19혁명이다. 고교생과 대학생이 주축이 되고 시민들까지 가세한 혁명에 마침내 부패권력이 물러나 대한민국에서 비로소 참된 민주주의가 출발할 수 있었다. 이후 4·19 정신은 1980년 5월 민중항쟁, 1987년 6월항쟁으로 이어져 마침내 김대중 정부에 의한 여야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념비적인 정사에 기념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4·19혁명의 희생 또한 만만치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부정선거 규탄 및 정권교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사망한 사람이 185명, 부상자는 1196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희생자를 위해 치른 희생에 대한 51년만의 사과를 위해 희생자와 혁명 참여자들은 기념사업회를 구성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 측에 꾸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50년이 훌쩍 지나고 말았다. 4·19혁명이 일어난 지 51년만인 올해 마침내 큰 변화가 예고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이 부정선거에 항거하던 국민적 저항이 곧 4·19혁명이다. 고교생과 대학생이 주축이 되고 시민들까지 가세한 혁명에 마침내 부패권력이 물러나 대한민국에서 비로소 참된 민주주의가 출발할 수 있었다. 기념사업회'와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는 19일 오전 9시 서울 수유리 4·19 묘역을 참배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는 성명을 발표한다고 지난 17일 전했다. 그러나 4·19혁명공로자회(회장 이기택) 등 관련단체 3곳은 18일 사죄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과 대상이 '국민 전체'여야 하며 유족 측이 더욱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때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 자행한 독재자를 위해 치른 희생에 대한 51년만의 사과는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51년만의 사과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